

# 중동 휩쓰는 시위... '新아랍의 봄' 번지나

### 레바논·이라크·이집트 동시다발 실업난·부패 항의 메시지 유사 청년층 주도...정치보다 민생 초점

최근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것이 2011년 중동에서 들불처럼 번진 '아랍의 봄'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바논에서는 이날 17일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12일 만에 사드 하리리 총리가 29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시위대에 항복했다.

레바논 시위는 정부가 스마트폰 메신저 앱에 하루 약 230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표에 항의하며 시작됐고, 점차 실업과 부패에 대한 반발로 의제가 확산했다.

앞서 이날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갈수록 격화 대규모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이라크 시위대도 실업난과 공공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불만을 분출했다.

29일(바그다드 현지시간) 하루만 경찰 발포로 18명이 숨졌다는 보고가 나오는 등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약 250명에 이른다.

이집트에서는 지난달 압델 파타 엘시시(압둘파타흐 시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례적으로 발생했다.

권위주의 통치를 펼치는 시시 대통령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제한하고 경찰력을 대거 배치해 시위를 원천 차단했지만 수도 카이로와 북부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

등에서 산발적으로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 3개국 시위의 공통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난 등 생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생고를 해결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며 부를 불리는 정치권의 부패도 청년층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랍권의 연쇄 시위는 8년 전 중동권을 휩쓴 '아랍의 봄'을 연상시켜, '신(新) 아랍의 봄'이나 '아랍의 봄 2.0'이 될지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중동 시위는 청년층이 주축이며, 정치·종파 갈등보다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2011년 아랍의 봄과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서방 역시 2011년 아랍의 봄이 내전이나 쿠데타 등으로 격화된 '학습효과'에 따라 시위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시위가 제2의 아랍의 봄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힘들

지만 중동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2011년 민중봉기가 미완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징표로 볼 수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아랍 민중은 권위주의 통치자에 압제에 저항했지만 자유를 쟁취하지 못했고, 사회 문제가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노와 좌절감은 언제든 대규모 시위로 표출할 수 있다고 BBC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총리 사임 환호하는 레바논 시위대

레바논의 반정부 시위 13일째인 29일(현지시간) 남부 시돈에서 시위대가 사드 하리리 총리의 사임 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50년까지 1억5000만명 주거지 바다 잠겨 방콕·상하이 위험...베트남 남부는 전역 수몰

### 기존 예상치 3배 연구결과 발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중 1억 5000만명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베트남 남부는 전역이 수몰 위기에 처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 연구진은 29일(현지시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 범위가 기존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넓은 지역에 대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위성사진 관측을 기반으로, 좀 더 정밀하게 지형지물을 배제한 땅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연구에 적용했다.

그 결과 만조 때를 기준으로 총 1억 5000만명이 2050년의 예상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현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남부는 거의 모든 지역에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베트남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명이 밀집한 곳으로,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논문은 이날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다. /연합뉴스

수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 이는 전체의 1%만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던 기존 예상치를 훌쩍 넘긴 것이다.

수도인 방콕도 수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로레타 허버 지라르데는 지구 온난화로 더 많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땅을 잃은 태국의 농부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쫓겨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상하이와 인도의 뭍마이 역시 도시 중심부 등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수몰 위험 지역인 이라크 바스라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다수의 역사·문화유산이 남아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임시방편으로 방파제 등을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위험 지역에 사는 인구를 재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기후·안보센터의 자문단에 소속된 존 카스텔로 전 해병대 중장은 "지금까지는 환경 문제에 가까웠다면, 이제 인도주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됐다"

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이주가 지역 갈등을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해당 논문은 이날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다. /연합뉴스

### 美캘리포니아 산불 확산

#### 서울시 면적 절반 태워

#### 시속 80km 강풍 중대고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북부에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화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최고 풍속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진화에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CNN·CBS 등 미 방송과 A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북부 소노마 카운티 일원과 남부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셔먼옥스·게티 센터 인근에 각각 큰 불이 일어나 세력을 키우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캘파이어)은 소노마 카운티 일원의 칸케이드 파이어가 29일 오전 7시 현재 7만5400에이커(305km<sup>2</sup>)의 산림과 일부 주택가를 태웠다 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면적(605km<sup>2</sup>)의 절반이 넘고, 샌프란시스코 시 면적의 2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 “브렉시트 혼란 끝내자”... 英 12월 12일 조기 총선

### 존슨 총리 요구 하원 통과

### 브렉시트 민심 바로미터 될 듯

영국이 오는 1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브렉시트(Brexit) 교착상태 타개가 목적인 만큼 이번 총선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이른바 '브렉시트 총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네 번의 도전 끝에 조기 총선 개최라는 목적을 이루게 됐다.

존슨 총리는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토대

로 세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고정임기의회법상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전날 세 번째 동의안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을 이날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 법안'은 하원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이날 법안 통과로 영국은 지난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총선을 실시하게 됐다. 당초 영국은 201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해 예정대로라면 다음 총선은 2022년 열릴 예정이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오후 법안 토론에 앞서 "끓임없는 의회의 방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서 "의회를 다시 채우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당부했다.

존슨은 이번 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는 계획이다.

그는 표결 승리를 위해 지난달 당론에 반해 투표했다는 이유로 출당시켰던 21명의 보수당 의원 중 10명을 복귀시켰다.

그동안 세 차례 부결됐던 조기 총선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이 입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中·러시아 군사동맹 체결 검토”

### 교도통신 보도... “美 아시아 미사일 배치 배경”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러 관계에 정통한 러시아 국립고등경제학원의 알렉세이 마슬로프 교수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부가 이미 군사동맹 체결 방침의 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 나라가 동맹을 문서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이 지원하는 '상호원조' 조항을 넣을지 여부가 초점이 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협력은 하면서도 군사적인 동맹 관계는 부정해 왔다.

통신은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 미사일 공격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됐다며 양국이 사실상의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남부 소치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중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이 시스템은 현재 러시아와 미국만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의 방위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런 발언을 전하며 양국이 전략적 상호의존을 깊게 해 동맹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라는 견해가 퍼졌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검토하는 배경에 두 나라를 적대시하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실효(폐기)된 뒤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